/ 세상에 이런 공공기관이… /

# 처외조모喪에 200만원

■ 이사회 의사록서 드러난 '모럴해저드'
'성희롱 휴가' 7일 요구했다 5일로
창립일·사회봉사활동 쉬고 또 쉬고
상환계획 없이 1조4000억 채권 발행

공공기관들이 연차휴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희롱 휴가, 창립기념일 대체 휴가 등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직원 부인의 조부모가 사망해도 기본급에 해당되는 액수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너무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비판은 22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재된 공공기관들의 이사회 의사록에서 확인됐다.

의사록에 따르면 김영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외이사는 작년 11월 27일 열린 이 공단의 임시이사회에서 "자녀를 입양할 경우 7일, 성희롱을 당할 경우 7일의 휴가를 각각 준다는 회사측 안건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런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나는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매주 토·일요일을 쉬는 데다 연차휴가 15~25일, 연간 17일에 이르는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은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지도 않을 휴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이 안건을 보류했으나 한달후인 12월 28일 이사회에서 성희롱휴가를 5일로 줄여 통과시켰다.

작년 8월의 근로복지공단 이사회에서 회사측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창립기념일 대체휴가 1일, 사회봉사의 날 대체휴가 1일, 태아검진휴가 월 8시간 규정을 회사의 인사복무규정에 반영하려 했으나 외부 출신 이사들의 반대에 부닥치자 유보하고 말았다.

당연직 이사인 기획처 사회재정기획단장 대신 참석한 이 부처 김재훈 노동여성재정과장은 "창립기념일과 사회봉사의날 대체휴가는 남발의 느낌이 있다"면서 "공단창립일이 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에 쉰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작년 6월 개최된 철도공사 이사회에서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시에도 기본급의 100%에 이르는 금액을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사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나 투자자세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게 나왔다. 김병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외이사는 작년 3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공단측이 1조4천억원의 채권발행안을 제시하자 "일반기업에서 채권발행시 원리금 상환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단은 정부기관이어서 별로 신경을 안쓰는데, 수입을 따져보면 원리금 상환방법이 없는 것같다"고 지적했다.

작년 5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회에서 김윤수 사외이사는 "오색호텔 투자의 경우처럼 공단자산에 큰 손실을 끼치는 무리한 투자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 사업투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탈북자 통보" 北-中 협약

## 불법 월경자 범위 확대…무장탈북 공동 대처키로

북한과 중국이 지난 98년 탈북자가 체포됐을 경우 즉시 명단을 통보해주도록 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경지역 업무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98년 7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공안부가 체결한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이하 국경지역 업무협정)'를 통해 드러났다.

북중 양국은 86년 8월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에서 '상황에 따라' 넘기도록 한 불법 월경자들의 명단과 관련자료를 즉시 상대 측에 넘겨주도록 명문화했다.

새 협정은 또 여권, 통행증 등 정상적인 증명서를 소지했더라도 규정된 출입국 검사기관을 통해 입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불법 월경자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각종 재해와 불가피한 사정(정신병자 등)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에는 불법 월경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 6차협상 성과 없이 마무리 한미 FTA 가시밭길

# 협상 전략 문건 유출 美 공세에 '사면초가'

6차 협상까지 마무리짓고 성패의 갈림길에 다가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협상장에서는 정치적 상황변화 등과 맡물린 미국의 강도높은 공세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은 형편인 데다 내부에서는 FTA 반대시위를 넘어 우리측의 협상전략을 담은 대외비 보고서가 유출되는 등 협상 자체에 대한 저항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하는 협상단은 안팎의 '적'에 둘러싸인 사면초가의 딱한 상황에 처해있다.

◇ **'대내협상'부족에 적전분열 양상**=6차 협상이 진행중이던 지난 18일 일부 언론에는 정부가 국회에 비공개 조건으로 보고한 한미FTA 협상전략 문건이 통째로 유출돼 기사화됐다.

우리측이 어떤 안건을 무기로 어떤 요구를 관철시킬 것인지, 우리가 얻어내기 어려운 사항은 무엇인 등을 담은 보고서였다.

또 6차 협상에 앞서 방송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간 논의결과가 고스란히 외부에 빠져나가자 방송위원장이 방송위 부위원장을 조사토록 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연이은 협상내용 누출사건은 누가 문건을 빠돌렸느냐는 문제를 넘어 FTA를 둘러싼 국내의 분열양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책임과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찬반 대립이 격화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반대의 방식'이 국익을 내팽개칠 정도로 극단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도 한미FTA에 대한 여론이 반드시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이 된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FTA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최대의 노조연합체인 산업별 노동총동맹(AFL-CIO) 역시 한미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을 이유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FTA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수평비교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달더라도 한미FTA에 반대하거나 한국에 부담이 되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측 모두 자국의 협상전략을 유출하거나 정도 이상 협상단에 압력을 가하는 무리수는 쓰지않고 있다.

◇ **"득실 종합점검…여론 설득 필요한 시점"**=인하대 정인교 교수(경제학부)는 "협상 전략문건 유출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상대방이 (우리측 전략을) 알게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 우리 측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얻을 수 있는 지를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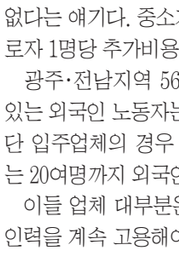
협상의 속성상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무엇을 확보하고 무엇을 내줄 지에 대해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성공회대 겸임교수)은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눈 덮인 한국전 참전공원** 워싱턴 한국전 참전공원 관광객들이 눈 덮인 참전 기념조형물을 둘러 보고 있다. 워싱턴에 눈이 내린 것은 올 겨울 들어 처음이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뜨거운 감자' 고용허가제



이종태
경제부 차장

광주 하남산업단지가 새해 벽두부터 시끄럽다.

올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로 바뀌어 현장마다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를 놓고 고심중이기 때문이다.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는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해 선진기술을 이전해준다는 취지아래 지난해까지 연수기간 1년, 취업기간 2년 형식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인권유린 등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하여 올해 고용허가제로 대체된 것은 알려진 대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내국인과 같은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을 벌일 수도 있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인력난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임금인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연수기간이 없어지면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나 부담이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힌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추가비용은 매달 37만원을 넘는다.

광주·전남지역 563개 중소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3천203명에 달한다. 하남산단 입주업체의 경우 업체당 적게는 2~3명, 많게는 20여명까지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외국인력을 계속 고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결손인력을 내국인으로 대체해야 하는가 고민에 빠진 상태다.

판로·구인난에다 자금줄마저 막힌 최악의 상황인데 외국인력에게 퇴직금, 시간외 수당지급은 물론 4대보험까지 가입해주는 부담까지 짊어질 업체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부정적 시각이 대세를 이룬다.

노사불안도 사업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 3권을 인정해줄 경우 하남산단내 전체 외국인력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물론 업체들로선 부담이 크다.

그러나 어차피 올해부터 고용허가제는 실시하게 돼있다. 중요한 것은 고용허가제를 우리나라 제조업체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력이 언어소통이나 기술습득에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국인과의 임금차별을 둔다든가,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등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력의 불법체류를 차단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한 법집행도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jtlee@kwangju.co.kr